AMNESTY INTERNATIONAL

2013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3

13

CONTENTS

인사말

04 **Chair's Letter** 이사장 인사말
05 **Director's Letter** 사무국장 인사말

인권보고서

08 **Foreword** 국제인권보고서
20 **Facts and Figures** 2012년 인권 현황
22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24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2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활동보고서

30 **Campaigns** 주요캠페인
38 **Education** 인권교육
40 **Media Work** 미디어활동
44 **Group & Network** 회원활동
46 **Activism** 참여활동
47 **Governance** 거버넌스
48 **Growth** 회원성장
50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시리아 Tarmala에 살던 Halima'Alaiwi는
그녀의 아들, 딸, 세 조카와 함께 폭격에 의해 숨졌다.
가족들은 점심을 먹고 있던 중이었다.
나머지 가족 15명도 다쳤고, 이중 13명이 어린아이,
2명이 여성이다. ©Private

Chair's Letter 이사장 인사말

사회적 약자의 권리 요구

2012년 한 해 역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고 나아가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 인권보호를 준비하기 위해 앰네스티의 시계는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강제퇴거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 무기거래조약 체결과 실효를 위한 긴 투쟁, 사형폐지, 동성애자 등 소수인권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한 인권보호에 국제운동과 발맞추고 있습니다.

2012년의 시작부터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제퇴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개인, 정부 및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산업시설을 위한 개발, 고급 주거지를 건축하기 위한 환경미화, 대형 문화행사,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행사 등 기업과 정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업이나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유치하는 행사의 이면에는 거의 대부분 강제철거가 빚는 인권침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공정한 보상과 후속 대책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집, 직장, 학교를 잃고 생계를 위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태를 겪지만 강제철거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주거권을 주장하거나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들 중에는 난민 생활로 불안한 여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서나 인도주의적 처우를 쉽게 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수용을 거절하거나 난민 캠프를 열악하게 방치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아프카니스탄 카불의 한 난민 캠프에서 어린이를 비롯한 100여 명이 추위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971년의 집단 학살에 대해 내려진 지난해의 판결에 대해 소수 종교집단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방화, 약탈, 강간 등의 폭력적 범죄로 자행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방임하고 있습니다.

권리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중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성에 대한 권리가 정치적인 결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동성애자 선전"을 금지하는 동성애혐오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질서유지라는 명분 하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거나 희생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12살 소녀를 강간한 남자를 그 소녀가 성노동자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페루나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미성년 소녀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가난 때문에 성매매 대상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아무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권 침해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정책결정을 합니다. 이때 국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재산, 신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신의 권리 요구를 위해 주장하거나 협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민주적 가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권이 지켜지려면 민주적 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결정될 때 참여하여 정당한 보상이나 대책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렌즈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정책결정자로 성장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전경옥**

Director's Letter 사무국장 인사말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권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부터 시작된 70년간의 현실 사회주의 실험의 종말 이후 역사의 주인은 '돈'과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자본주의였습니다. 개인, 국가, 세계를 움직이는 비전과 세계관으로서 자본주의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계화란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자본주의는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쪽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어떤 쪽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돈 될 것'은 죄다 시장으로 들고 왔습니다. 결과는 시장을 지배하는 1%와 99%의 시장노예 혹은 패배자였습니다. 2011년 9월 17일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터져 나온 99%의 저항은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50%를 장악하고, 경제위기의 주범이면서도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처한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1,500여 개의 도시에서 빈부격차해소를 외치며 반(反)월가 시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시장낙오자에 대한 약탈을 멈추고 1%가 각성을 시작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99%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돈과 이윤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때로는 1%가 먹다 남긴 50%를 두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대안으로서, 99%가 1%를 향해 외치는 '정의'의 구호로서 '인권'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도 이런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1%가 주무르는 국가폭력에 99%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살길을 찾아 세계를 떠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란 낙인이 찍히고, 전쟁으로 배를 불리는 무기상들의 놀음에 연간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지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각성이 '인권'을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운동에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이 갖는 역사적 당위성은 그래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핵심에 '인권'이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다면 통제불능의 신자유주의도 자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부는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무기거래조약, 이주노동자, '위안부'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주요 캠페인으로 펼쳤습니다. 2013년이 시작되고 드디어 4월 2일 무기거래조약체결의 성공으로 10년 넘게 벌여온 캠페인이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다른 부분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아베 신조 총리의 등장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되면서 '위안부' 문제는 강제동원을 인정한 95년 고노 담화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강제추방되기 일쑤입니다. 인권국가란 이름을 내걸기에는 부끄러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전 세계 99%를 위한 인권운동의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더 많은 회원, 시민들과 함께 더 큰 영향력으로 1%의 횡포에 맞서 돈보다, 이윤보다, 개발보다, 인간이 먼저임을, 그래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는 그날을 위해 이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을 가는데 회원 여러분이 함께 동행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갈상돈**

인권보고서

이스탄불의 Agos 신문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저명한 언론인 Hrant Dink의 5주기를 기리고 있다.
©REUTERS/OSMAN ORSAL

Hrant Dink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투르크 제국시절 터키가 100만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을 대량학살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국가를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2007년 사무실 앞에서 불의의 총격으로 숨졌다. 언론들은 일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를 비난하며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그를 죽였다고 말했다.

FOREWORD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3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Human rights know no borders

살릴 셰티 사무총장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기름유출로 신음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보도 마을에 방문한 살릴 셰티 사무총장

"불의는 어디서 발생하건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호관계의 그물에 얽혀 운명이라는 하나의 천에 묶여 있다. 한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틴 루터 킹, 「버밍엄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1963년 4월 16일

2012년 10월 9일 파키스탄의 15세 소녀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가 탈레반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여아들의 교육권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말라라가 이용한 수단은 블로그였다.[1] 2010년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의 행동[2]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라라의 투지는 파키스탄의 국경을 뛰어넘어 훨씬 먼 곳까지 다다랐다. 인류의 용기와 고통이 국경에 갇히지 않는 소셜미디어의 힘과 만나 인권과 평등, 정의를 위한 투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동시에 국가 주권과 인권에 대한 담론에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정부와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탄압과 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거리는 물론 디지털 공간으로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모하메드에 대한 추모와 말라라의 꿈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및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통해 일종의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용기는 자유와 정의, 인권에 대한 갈망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힘을 얻어 권력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를 지지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평화적인 시위를 무참히 진압하고 특히 가상공간에조차 국경을 만들어냄으로써 필사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통제하려 했던 많은 국가의 조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1) 탈레반은 하교길의 여학생들에게 "누가 유사프자이냐"고 물으며 "나오지 않으면 다 쏘아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그녀가 자신이 유사프자이라고 밝히자 그녀에게 총을 쐈다. 유사프자이는 09년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파키스탄 소녀들의 이야기를 BBC 블로그에 연재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영국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고 지난 2월에 퇴원했다.

2) 튀니지의 과일 노점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정부의 단속으로 손수레를 빼앗긴 것에 항의하며 분신하여 재스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국가들은 대량 살인과 집단 학살, 억압, 부패, 기근, 성별에 따른 박해를 은폐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 구실로 주권을 주장해왔다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고, 권력유지의 도구였던 억압과 허위정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든 민중의 잠재력을 깨달은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며 남용하고 있는 '주권'이란 무엇일까?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정치적, 무역 체제가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무기거래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자국민 탄압에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기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는 국가들은 무기거래를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말로 이를 정당화시킨다.

주권과 연대 Sovereignty and Solidarity

자유와 인권, 평등을 위해서는 주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로부터, 또는 지배하려 드는 이웃 나라로부터 벗어난 나라, 또는 억압적이고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린 시민 운동을 통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권이란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주권의 힘이다. 이렇게 주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착취적인 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국제적 연대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시민이다. 우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국가들은 종종 외부의 개입 없이 국내 사안을 통제하는 것이 주권인 양 주장하며 원하는 대로 휘두르려 한다. 대량 살인과 집단 학살, 억압, 부패, 기근, 성별에 따른 박해를 은폐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 구실로 주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이 이러한 침해 행위를 간단히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이용해 인권침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업로드하여 위선적인 미사여구와 자기합리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 등 유력한 민간 행위자들 역시 그들이 저지른 편법이나 범죄로 인한 결과를 은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기 쉬워지고 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인권 현장에서는 주권이 있다고 상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05년 유엔UN 정상회담에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 원칙은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2012년 한 해만 해도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인권 보호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요소는 국가가 개인, 가족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표현 · 결사 · 양심의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출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대한 선택과 같이 본인의 신체와 그 사용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2012년이 밝은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폭력적으로 쫓겨나 300가구가 집을 잃었다. 불과 몇 주 뒤에는 브라질 상파울로주의 피네이리노Pinheirinho 슬럼 주민 600명이 같은 신세가 됐다. 2012년 3월 자메이카에서는 경찰의 총에 21명이 숨졌고, 아제르바이잔의 음악가는 구타당하고 체포되어 구금 중에 고문을 당했으며, 말리는 수도 바마코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위기에 빠졌다.

©REUTERS/Mohammed Salem

BBC 아랍지국의 직원 지하드 알 마샤라위Jihad al-Masharawi 가 생후 11개월된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다. 아이의 사망원인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한 것인지 팔레스타인의 로켓공격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무국적자로 전 세계 1,200만 명에 이른다. 런던, 라고스, 리우데자네이루 등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도시의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 중 약 80%는 여성이다

사건은 계속되어, 나이지리아에서는 더 많은 강제퇴거가 있었고, 소말리아와 멕시코 등지에서는 기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여성들은 집에서, 거리에서 항의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강간Rape이나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을 당했다. 성소수자LGBTI 단체가 여는 거리행진 축제가 금지되고 회원들이 구타를 당했으며, 인권활동가들은 날조된 혐의로 목숨을 잃거나 구금되었다. 9월 일본은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11월 이스라엘-가자 사이의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르완다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 '3월 23일 운동M23'이 수도인 북부 키부 지역까지 진군하면서 주민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 유엔 발표 사망자 수는 2012년 말 현재 6만 명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권 보호 실패 Failure to protect

지난 수십 년 간 국가 주권이 국가 안보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면서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너무나 빈번하게 이용됐다. 권력자들은 오직 그들만이 자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하자 군대를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982년 하마 학살Hama massacre 당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대량 학살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자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용기 있는 시리아의 블로거와 활동가들은 자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직접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2년 가까이 시리아군은 반군을 지원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이들을 구금, 고문, 살해했다. 31가지의 다양한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형태를 기록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도 있다.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그 규모는 훨씬 적을지언정 즉결처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때문인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정부와 군대가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는데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개별 국가나 국제사회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994년 르완다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2009년 스리랑카 북부의 치명적인 "사격 금지구역"에 타밀인들을 몰아넣어 민간인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기근이나 시리아 분쟁 등에 대해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본래 국가는 자국 내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권과 정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주권이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행사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절대적인 주권과 국가안보가 인권과 인간존중보다 우선한다는 국가들의 해악이 되는 주장에 맞서야 할 때다. 더 이상의 변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세

정부가 선주민들로부터 천연자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배워야 할 때다

계시민을 수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행한다 해도 일관성 없이 하는 것이 고작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인권 활동을 통해 양심수 석방부터 전 세계 고문 금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까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지만 이처럼 주권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권 운동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보호냐 착취냐 Guardianship or Exploitation

지난 수십 년간 주권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사례는 세계 각지의 선주민에 대한 처우다. 전 세계 선주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주요 가치는 토지 '소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대신 선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수호자로 여겼다. 이 같은 토지 소유 개념에 대한 거부는 엄청난 대가로 돌아왔다. 선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대부분은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이 땅을 '주권국'에 귀속시켜 매매, 임대하거나 이방인들이 마음껏 약탈하게 하고 있다.

토지와 자원의 수호자였던 선주민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신, 정부와 기업은 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 선주민을 강제로 몰아내고 토지의 소유권, 또는 그와 관련된 채굴권을 차지했다.

파라과이의 사호이야막사Sawhoyamaxa 선주민들은 2012년 한 해를 지난 20년만큼이나 힘겹게 보냈다. 토지에 대한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2006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났다. 캐나다의 선주민 수십 개 공동체는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땅을 가로질러 놓이게 될 앨버타Alberta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해안간 송유관 건설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선주민들로부터 천연자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배워야 할 때다. 그러나 오히려 선주민 사회는 세계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 같은 황폐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유엔 선주민권리에관한선언UN Declaration o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유엔 선주민권리에관한선언은 선주민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백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그들의 마을과 땅을 지키려다 폭력, 심지어는 살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 소외, 폭력은 미주 대륙뿐만 아니라 필리핀부터 나미비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났다. 나미비아의 경우 산San, 오바힘바Ovahimba 등 소수민족 출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과 마주해야 했다. 특히 오푸오Opuwo에서는 오바힘바족 어린이가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고, 전통복장을 못 입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본과 사람의 흐름 The flow of money and people

자원경쟁은 세계화 시대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또 다른 요소는 국경을 넘고 대양을 건너 권력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자본의 흐름이다. 그렇다. 세계화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이룩했지만, 정부와 기업이 이윤을 착취하는 사이 굶주리고 있는 선주민들의 경험은 다른 공동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가 상당한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밖의 조세피난처로 흘러가는 자본과 부정부패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 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 탓에 기업과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양여 합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데다 책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아 기업 주주와 정치인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반면에, 노동을 착취 당하고, 땅의 가치가 절하되고 인권을 침해 당한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정의는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각지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에서도 나타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공식적인 국제개발원조금의 세 배에 달한다. 그러나 2012년에는 송출국도, 유입국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12년 네팔의 직업알선업체들은 노동자들을 착취와 강제노동의 대상으로 매매하고, 정부가 정한 수수료 상한을 훨씬 웃도는 중개료를 부과했으며,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고리대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계약내용과 노동조건을 속이는 일도 많았다. 네팔법을 위반한 직업알선업체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여성인권에 대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았던 법률의 한 예로,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지에서 일하다가 성폭력과 기타 신체적 학대에 겪은 네팔 여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네팔 정부는 30세 이하의 여성이 이들 국가로 이주해서 가정부로 취직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금지조치로 인해 여성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잠재적 위험만 더욱 커졌다. 정부는 여성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송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국 영토를 벗어났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하고, 유입국은 이들이 자국민이 아니므로 권리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 채택된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은 인권협약 중에서 비준한 국가가 가장 적은 협약이다. 서유럽 유입국들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걸프 지역 국가 등 이주노동자 인구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난민의 경우는 더욱 취약하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무국적자로 전 세계 1,200만 명에 이른다. 런던, 라고스, 리우데자네이루 등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도시의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 중 약 80%는 여성이다. '주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난민의 경우야말로 인권 보호 의무의 이행에 관한 논쟁에 있어 가장 명확한 사례일 것이다. 모국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현재는 인권 보호가 국가 주권보다 부차적인 듯하다. 남수단의 난민 캠프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호주부터 케냐에 이르기까지 난민 신청자들은 수용소나 철제 상자에 갇혀 있으며, 물이 새는 보트를 타고 필사적으로 안전한 항구를 찾던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기거래는 차별,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 피해는 여성에 집중된다. 이는 평화, 안보, 성평등 및 지속적인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2012년에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간신히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한 배가 안전한 유럽 해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려보내졌는데,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국경 통제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의 바다를 통한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바다를 통한 이주민 입국을 금지하면 이주민들은 미국에 입국했을 때 드는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자신들의 조치를 옹호했다. 모든 경우에서 비호를 신청하는 개인의 인권보다 주권이 우선되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사막을 횡단하려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매년 200여명에 이른다. 이주민들이 안전한 경로를 통해 지나갈 수 없도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다. 이민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막을 횡단하다 사망한 이들의 수는 여전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권을 비롯해 인권 증진 의무를 가장 악랄하게 저버린 사례로, 앞서 말한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민 통제 정책은 소형화기, 경화기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거래가 국가 간에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도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무기거래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강간당하며, 집을 버린 채 피난을 떠나고 있다. 또한 무기거래는 차별,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 피해는 여성에 집중된다. 이는 평화, 안보, 성평등 및 지속적인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적으로 무기를 쉽게 구매, 교환하고 이전할 수 있어 폭력적인 정부와 치안군, 반군 지도자, 범죄조직이 쉽게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매년 미화 7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지 좋은 사업인 만큼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들은 무기거래가 규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 보고서가 인쇄되는 시점에서 세계 주요 무기거래국은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3]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거나 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사용될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경우 무기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의 흐름 The flow of information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희망은,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반 세기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며,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노력해 왔다. 세계화된 소통으로 근대 인권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권'의 경계 뒤에 숨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의사소통 형태가 우리 삶에 뿌리내리는 속도는 숨이 막힐 정도다. 1985년 닷컴.com 도메인이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25억 명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오늘날까지 변화의 수레바퀴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1989년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가 인터넷의 문서 검색 기능을 제안하고, 1996년 핫메일이 탄생했으며, 1999년에는 블로그, 2001년에는 위키피디아

3) 2013년 4월 2일, 유엔 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되었다. 2013년 6월 3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국가들이 서명할 수 있으며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 실질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가 첫선을 보였다. 2004년 페이스북이 생겨났고, 1년 후 유튜브가 뒤를 이었으며, 그와 함께 "통계적으로 상하이에 거주 중인 24세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10억 번째 인터넷 사용자가 나타났다. 2006년에는 트위터, 검열기능이 있는 구글 중국판 '구거Gu Ge'가 등장했다. 2008년에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미국을 추월했다. 같은 해, 케냐의 시민기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스와힐리어로 '증거'라는 뜻의 '우샤히디Ushahidi'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초기에는 선거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를 지도상에 기록하는 역할을 했는데, 플랫폼으로 개발된 이후에는 '정보의 민주화'라는 임무를 띠고 세계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세계에 살고 있다. 활동가들은 인권침해를 은폐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를 가졌다. 정보는 행동해야만 할 의지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결정적인 시기에 마주해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정보에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과 결탁한 정부로부터 정보접근을 차단당할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며,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권력자와 주권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면 세계 시민권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과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의 개념에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이 "피할 수 없는 상호관계의 그물Inescapable network of mutuality"과 "운명이라는 하나의 천single garment of destiny"이라고 유려하게 표현했던 것은 전후의 수많은 위대한 사색가들과 인권옹호자들이 지지하고 홍보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이것을 시민권의 국제적 모델이라는 "천fabric"에 적용해야 할 때이다.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라는 말이 이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I am because we are"는 뜻이다.

국경, 장벽, 대양을 뛰어넘어, 더 이상 적(敵)을 정의와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는 "타인the other"으로만 묘사하지 말고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통해 진정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기관과 참여 Agency and Participation

간단한 이야기다. 디지털 세계의 개방성 덕분에 세상은 더욱 공평해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기업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장려하는 도구다. 정보는 곧 힘이다. 인터넷은 오늘날 세계를 살아가는 70억 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켜보고, 기록하고, 맞설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다. 정보 공유를 통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인간 존중과 인간 계발을 증진하며, 인권이 약속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국가 주권의 남용은 이와는 정반대다. 장벽을 세우고, 정보와 통신을 통제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는 법으로 은폐하며 특권을 주장한다. 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 뒤에는 정부가 제 앞가림만 하고 있으며, 자국 영토 안에서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가 지닌 힘과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또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력이 사회적 권리 마련에 관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PIERRE-YVES BRUNAUD_PICTURETANK

푸시 라이엇의 석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푸시 라이엇Pussy Riot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종교적 증오를 기반으로 한 난동죄'로 기소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국제앰네스티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가 정보의 접근 자체를 조작하려 하는 시대를 다시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 튀니지, 쿠바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르는 국가에서 블로거들이 기소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무엇보다 명백한 그 증거다. 베트남에서는 디우 케이Dieu Cay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응우엔 반 하이Nguyen Van Hai, '정의와 진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한 타 퐁 탄Ta Phong Tan, 안반사이곤AnhBaSaiGon으로 알려진 블로거 판 탄 하이Phan Thanh Hai 등이 지난 9월 국가에 반하는 '선동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 10년, 4년을 선고 받았고 3년에서 5년 사이의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재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으며, 이들의 가족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구금됐다. 또 재판은 세 번이나 연기되었는데, 마지막 재판이 연기됐던 이유는 타 퐁 탄의 어머니가 딸에 대한 부당대우에 항의하며 관공서 건물 밖에서 분신을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권력자에 맞서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방어책에 불과하다. 디지털 소통 수단이나 정보 시스템에 방화벽을 구축하려 하는 국가들의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란, 중국, 베트남의 경우 모두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사용 가능한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감시와 더욱 교묘한 정보 접근 조작법을 통해 눈에 띄지 않게 통제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무인 정찰기 공습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감시와 통제의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를 거의 고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국경 도메인에 얽매이지 않는 디지털 문서 보관함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이나 미국 시민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정보 역시 포함된다.

정보 접근과 소통 수단 통제를 둘러싼 이러한 싸움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시위 가운데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용감히 나섰던 사람들에게 국제사회가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말라라 유사프자이를 비롯해 감히 일어서서 "이제 그만!"을 말했던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각국 정부에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 실질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실제로 부담 없는 가격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다. 그렇게 하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5조가 "과학적 발전과 그 창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는 인권 조항을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 내의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누리며 과학적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을 서로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미 있는 인터넷 접속은 분명 과학적 발전의 이익을 누리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수년 전, 국가들은 국내에 설치되어 있어도 다른 국가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세계적 우편 시스템을 구성하는 국제우편제도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지를 쓰고, 우표를 사서 세

계 어느 곳으로든 부칠 수 있었다. 집에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우편물을 찾아갈 장소를 지정하는 유치 우편留置郵便 제도도 있다.

이러한 우편물은 얼마나 많은 나라를 거쳐왔든 간에 개인의 사생활로 여겨졌다. 지금 보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인 이러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방식은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소통에 사생활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우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적인 우편물을 읽으려 접근했던 정부도 많긴 했지만, 이러한 의사 소통의 사생활 권리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었다.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정보와 가족, 사회의 일상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다. 투명성과 정보 접근, 정치적 토론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사회적 권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터넷 접근을 보장하는 것처럼 인권에 있어 즉각적이고, 강력하면서도 엄청난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정부의 조치는 아주 드물다.

세계 각지의 국가 정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처럼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권력을 차지하는 데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에 힘을 불어넣고 이를 증진시키는 데 이용할 것인가?

인터넷이 등장해 휴대폰이나 인터넷 카페, 학교, 도서관, 직장, 가정용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권리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식과 정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은 곧 힘이다

미래를 위한 선택 The choice for the future

각국 정부에게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에 실질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도서관이나 인터넷 카페와 같이 사람들이 무료로, 또는 적당한 이용료를 내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현재 어떻게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이 세계적으로 6억 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여성이 이러한 정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과 행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유엔여성기구와 인텔Intel,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도, 멕시코, 우간다 등의 국가에서는 성별 간 인터넷 격차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 등과 같은 장소는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여성 및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공학 학위를 취득한 어떤 인도 여성은 이 연례보고서를 만드는 조사관들과 만나 "여자가 손을 대면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컴퓨터 사용을 금지 당했다고 전했다.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를 접하게 될까 봐 일부 남편들이 부인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미확인 사례도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남성 70%가 인터넷에 접속해 본 반면, 여성은 14%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채 버려지는 사람으로 나뉜 두 개의 계층이 생겨나게 될 위험이 있다.

지식과 정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은 곧 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이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자력화를 증진시킨다. 국경이 없는 디지털 공간의 속성 덕분에 사람들은 집과 가까운 작은 공간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인권 존중의 증진에 이러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세계 시민권을 행사하는 데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연대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12월, 국제앰네스티가 10번째로 진행한 세계 편지쓰기마라톤의 일환으로 수천여 명의 활동가들이 캠페인을 벌였던 12명의 사례를 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행사인 편지쓰기마라톤은 지난 수 년간 이메일, 디지털 탄원, 문자 메시지, 팩스, 트위터 등의 수단을 도입하면서 200만 건의 참여가 이루어져, 신념을 지키다 구금된 사람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힘을 보태며 이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국제앰네스티에게 인터넷이란 엄청난 미래이자 가능성이다. 50년 전 창립자 피터 베넨슨이 보았던,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국경을 뛰어넘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피터 베넨슨의 꿈은 그 시대의 가장 허황된 헛소리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했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그 꿈을 위해 목숨과 자유를 바쳤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무시당할 또 다른 꿈을 꾸고, 실현시킬 출발점에 서 있다.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세계가 변화했음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도구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희망을 주는 한 가지는 바로 보통사람들이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야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힘이다. 사람들의 압력이 없다면 각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앰네스티를 통해 받은] 메시지가 나에게 커다란 희망이 됐다."

아자 힐랄 아흐마드 술레이만Azza Hilal Ahmad Sulei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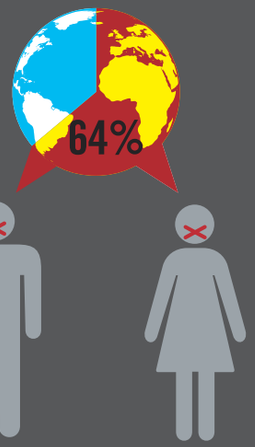
아자 힐랄 아흐마드 술레이만은 2012년 편지쓰기 마라톤 사례자이다. 술레이만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이집트군이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구타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움직일 수 없는 여성을 목격했다. 이 여성을 도우려 하자 군인들은 되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레이만을 폭행했다. 술레이만은 두개골 골절과 기억력 손상을 입었다. 현재 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회복 중에 있다.

Human Rights Facts and Figures 2012

2012년 인권 현황

2012년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9개 국가 및 영토에서 고문, 불법살인, 강제퇴거, 강제실종,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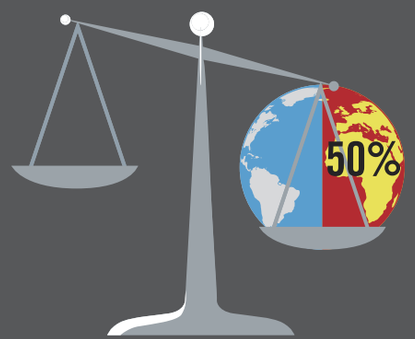
112개국
112개국에서 시민들을 고문했다



101개국
101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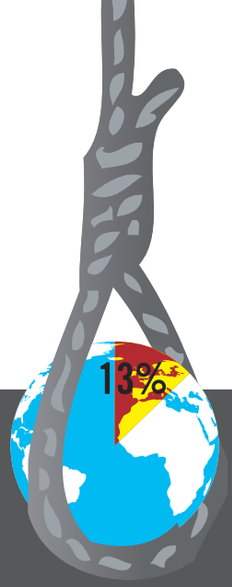
155개국
4월 155개국이 UN 총회에서 무기거래조약에 찬성했다

단 3개국 만이 조약에 반대했다



80개국
80개국에서 불공정재판이 있었다

57개국
57개국에서 양심수가 구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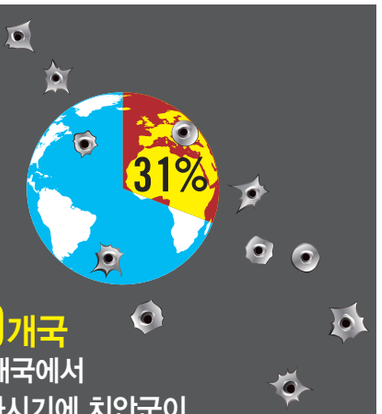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와 당신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모하메드 사에드의 고문기술자. 모하메드 사에드는 총리직을 사임한 직후인 2월 9일, 몰디브의 아두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2012년 2월.

21개국
단 21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2년 말까지 전 세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140개국 이상이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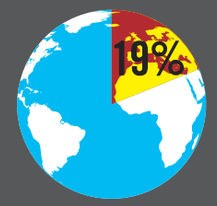


50개국
50개국에서 평화시기에 치안군이 불법살인을 저질렀다

36개국에서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강제퇴거에 처했다

36개국

31개국
31개국에서 사람들이 강제실종 당했다



1,200만 명
2012년 초에 1,200만 명이 무국적자였다

본 자료의 통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국제앰네스티가 2012년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곳의 정보를 종합한 것입니다.

1,500만 명
현재 1,500만 명이 난민으로 등록되어있다

REGIONAL OVERVIEW : ASIA-PACIFIC

지역보고서 :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정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사람들이 정부 당국에 맞섰다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공격을 받았고, 구금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다.

베트남에서는 블로거와 작곡가 등을 비롯한 평화적 반정부 인사 20여명이 국가 안보에 관한 날조된 혐의를 받고 구금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성모독죄로 6명을 구금했고, 평화적 정치 활동가 70명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캄보디아 치안군은 강제퇴거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다. 중국에서 대규모 강제퇴거에 항의하던 사람들은 구금, 징역에 처해지거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질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스리랑카에서는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체포되거나 납치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인도에서는 기업의 이익추구에 맞서 대대로 살아온 토지의 소유권을 지키려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소되어 수감되었다.

"정부는 기업과 결탁해 경제적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차지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린 주리안, 중국 광둥성 우칸 마을 신임 대표, 2012년 3월 1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고위 지도층의 변화가 있었지만 인권 상황의 개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명 이상을 구금했다. 2011년 김정은이 최고권력자가 된 뒤로 리더십 강화에 힘쓰고 있는 북한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들은 외딴 수용소로 보내져 심각한 영양실조와 중노동, 고문에 시달렸고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일이 계속됐다.

몰디브에서는 모하메드 나시드Mohamed Nasheed 전 국무총리의 사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당했으며, 특히 나시드 전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치안군들의 집중 표적이 되어 고문을 당했다. 계속되는 무력분쟁으로 수만 명의 삶이 황폐해졌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태국에서는 자살 테러, 무차별 폭격, 공습, 표적살인 등으로 인해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국가가 여성 권리를 제대로 보호 · 증진하지 못하면서 여성의 꿈이 계속해서 좌절되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탈레반에 의해 처형 형식의 살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도에서는 윤간을 당하고 사망한 학생의 사건이 대중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이러한 여성폭력이 만연한데도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활동가들의 10년에 걸친 로비 끝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건강법Reproductive Health Law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인권에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우리를 정말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파푸아에서 폭력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지 오래지만 한번도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소프얀 요만 신부, 인도네시아 파푸아, 2011년 10월 22일

"나의 존엄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 리홍, 베이징 샤오훙먼에서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이후 마지막으로 남은 주민, 2011년 1월

사형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후퇴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본, 파키스탄, 대만이 사형집행을 재개한 반면, 베트남은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마약 관련 범죄와 살인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형선고 조항을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미얀마에서는 놀랍게도 기회와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11월, 미얀마 당국은 수감자 재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한 해 수백 명의 정치수를 석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 명은 자의적 체포, 구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얀마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역시 마찬가지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AP PHOTOS/IMAGINE CHINA

중국 광저우시의 강제퇴거 현장의 집을 잃은 주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일상화되어 있다.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보고서

대한민국(남한)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김황식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 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언론 노동자들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항의해 파업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장기간 노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 위협받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차별과 노동착취를 당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배경

12월 박근혜가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3년 2월 취임할 예정이다.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전체 300석 중 152석을 차지했으며,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었다. 8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한 협의 없이 재임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10월 한국은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받았다.

표현의 자유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이었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되었다.

- 2011년 5월 김명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검찰이 항소했고, 2월 22일 항소법원이 김명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명수는 유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 11월 21일 박정근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정근은 풍자하려는 의도로 금지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해 2011년 9월부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정근의 일부 게시물이 패러디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반국가 단체에 호응하고 가세"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입국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 4월과 10월 그린피스 활동가 6명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12월 그린피스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비판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 노동자 –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문화방송MBC이 1월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방송KBS, 뉴스 전문 채널 와이티엔YTN,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방송과 연합뉴스가 6월 파업을 종료했으나 문화방송은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면서 7월까지 파업을 이어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최소 750명이 12월 현재 수감되어 있다.

- 4월 인권활동가 유윤종이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주도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가 민 · 형사상 고소, 고발 및 기소를 당했다. 2009년 7월에서 2012년 8월 사이 58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10월 이후 24시간 공사가 시작되었고, 야간에 경찰이 강제로 시위대를 끌어내면서 최소 6명이 입원했다. 5월 유엔특별보고관들UN Special Rapporteurs은 공동서한을 통해 평화로이 집회 · 시위를 한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부당대우한 것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동자 권리

장기간 노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당국은 파업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9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노동자 2,600명이 직장을 잃었다. 11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세 명이 평택 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 7월 민간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직원 200여 명이 날카로운 쇠붙이 부품 등을 조합원 150여 명에게 던지고 진압봉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없었다. 노동자들은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어 이주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추방되었다.

- 11월 인도네시아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의 야간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착취, 저임금, 체불임금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형제도

계속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사형집행은 없었다. 12월 현재 최소 60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세 개의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이다.

국제앰네스티 방문/보고서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이 4월, 6월, 11월 한국을 방문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ASA 25/006/2012)를 11월 29일 발표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원수 김정은
내각 총리 최영림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널리 퍼져있다. 영양실조가 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식량위기가 지속되었다. 계속해서 수백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어 식량 원조에 의존했다. 정치범 수용소 한 곳이 폐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수만 명이 여전히 초법적 처형, 강제노동,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에 구금되어 있다. 권력이양 과정에서 축출된 사람을 처형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도 계속됐다. 언론도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배경

김정은 최고지도자는 김정일이 2011년 사망한 후 4월 11일 북한 노동당 제1비서라는 새로운 직책에 선출되었으며, 7월에는 북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여러 차례 실패 끝에 12월 3일 은하 3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1월, 국영언론은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면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면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7월에는 홍수로 인해 주택과 기간시설, 공공건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 관리에 따르면 최고 21만 2,200명이 집을 잃었고 169명이 사망했다.

식량 위기

2년째 경작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식량 사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11월 유엔식량농업기구U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작물 식량 안보 미션Crop and Food Security 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식품소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영양섭취 권고량과 실제 섭취량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 북한 인구 중 상당수가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인구의 절대 다수가 만성적인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수만 명이 기소 혹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거나 무기한 억류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초법적 처형, 휴일 없는 장시간 강제노동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수의 구금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사망했다.

10월 함경북도 회령 소재 정치범 수용소 22호가 폐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폐쇄된 시점 및 그곳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만에서 5만여 명이 어디로 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5개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인 회령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유예도 없이 종신 구금하는 완전 통제지역이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대다수는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며, 다만 정권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거나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로 억류되었다.

- 4월 북한 당국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의 질의에 요덕에 위치한 15호 관리소에 두 딸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가 간염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답했다. 북한 당국은 신숙자의 딸들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오길남과의 접촉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숙자의 사망 시점과 장소도 확실치 않았다. 두 딸의 신원과 행방도 알려지지 않았다.

12월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Kenneth Bae를 '적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배는 관광객과 북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여행사를 운영했다. 케네스 배는 11월 3일 북한에 입국해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북한 치안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다.

강제 실종

북한 당국은 북한 첩보원들이 일본, 레바논, 남한, 태국 등 해외에서 납치를 행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 후지타 타카시는 7월에 열린 유엔 강제적 · 비자발적 실조에 관한 실무그룹UN's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회의에 참석해 동생 스스무가 1976년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며 사건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

당국은 계속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권력 이양기 동안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독립적인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의 자유

중국과 접하는 국경을 더욱 단단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2월,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은 31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3월에 이들 중 일부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북한에서 이들은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 강제노동을 겪을 위험이 있으며, 사망할 위험도 있다.

사형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해당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 10월,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2012년초 처형당했다는 복수의 미확인 보도가 있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례기간 동안 음주 및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제감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정치범 수용소의 운용, 빈번한 공개처형, 심각한 식량난과 더불어 접근허가를 받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점이 북한을 심각한 문제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3월과 11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및 유엔 총회 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는 각각 표결 없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결의안 모두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시민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활동보고서

캄보디아 강제퇴거중단 액션패키지에 참여한 사람들.

©Amnesty International

무기거래조약

2012년 7월, 유엔에서 무기거래조약ATT 제정을 위해 한 달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회의에서 조약 체결을 위한 캠페인 및 로비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한국지부도 국제행동주간에 맞춰 50일 동안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반대로 조약 체결은 무산되었으나 10월 유엔총회에서 2013년 3월에 무기거래조약 최종회의를 다시 한 번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2 평화군축박람회

©Amnesty International
무기거래조약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Amnesty International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서명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한국지부는 강력하고 엄격한 인권규정이 담긴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7월에 열린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를 50일 앞둔 5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트위터 액션, 외교부와 국방부 앞 거리캠페인, 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한 결과 총 7,908명이 글로벌 탄원에 서명했으며, 이는 외교통상부 및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지부는 6월 27일 여성평화외교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 2차관을 만나 강력한 조약 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교섭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탄원서를 관계부서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주요 무기거래국 대상으로 각 대사관에 무기거래조약 체결에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무기거래조약 회의에서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로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조약 체결에 대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조약의 전문 및 기준 등에 대한 협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NGO에서 엄격한 인권규정이 조약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마지막 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조약 체결협상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10월에 열린 유엔총회UNGA 에서 2013년 3월에 최종회의를 열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9월에 열린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에서는 무기거래조약의 의미를 시민들에 알리고 2013년에는 조약 체결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연대의 메시지를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권을 침해하는 곳에 쓰지 말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인 사안들에 더욱 힘을 써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13년 3월 유엔 무기거래조약 최종회의는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료되었으나 회의 직후 열린 유엔총회 특별세션에서 유엔 회원국 다수의 지지(찬성 155표)로 강력한 인권규정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형제도폐지

2012년은 한국이 사형집행을 중단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완전한 법률적 폐지를 위한 국내의 입법 활동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회에 세 차례 걸쳐 제출된 사형폐지 관련 법안은 5월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며, 이후 사형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새로운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들어 심각한 강력범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사형제도 찬반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10월 1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 사형포스터 전시

2012년 3월 27일, 한국지부는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연례사형현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사형폐지 흐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상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으나 운용을 하지 않는 등 2011년은 사형제도폐지 흐름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전보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수가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3월 28일에는 한국지부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사형, 또 다른 살인〉 사형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형수로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10월 1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제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년 동안 사형폐지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성과, 당면한 과제 등을 분석한 「제 10회 세계 사형반대의 날: 10년의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유인태 국회의원과 13개의 인권 · 시민 · 종교 ·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10월 30일 국회의사당에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폐지하라〉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형제도폐지의 국제적 동향, 미국의 사형폐지 현황 및 한국의 사형제도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사형폐지 포스터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포스터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해 성북구청에서 개최되었던 '제 1회 성북 인권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지 15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며, 한국지부는 시민 · 종교단체와 함께 2012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에서 〈사형집행중단 15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더 이상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아닌 법적 · 사실적 사형폐지국이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대사관 등을 방문해 국내 사형제도폐지 운동의 흐름과 캠페인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게 사형제도 운용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주노동자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4년 10개월 동안 다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변경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노동부는 8월부터 노동부가 구직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던 것을 중지하고, 고용주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네팔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외고용법'이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사채업자와 취업알선업체에게 속아 큰 빚을 지고 인신매매를 당해 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이주노동자와 함께 피켓을 들어주세요 캠페인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할수록 이주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수당, 부적절한 안전 조치, 물리적 · 성적 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착취를 견뎌야만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지침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착취위험 증가시키는 고용노동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침을 철회하라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8월 28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탄원 캠페인에 모두 1,231명이 참여해 고용노동부에 탄원을 전달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고용허가제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함께 피켓을 들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모국어로 쓴 모자피켓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캠페인에서는 권리보유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습니다. 캠페인 브리핑과 탄원 엽서를 네팔어로 작성, 배포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1주년 세계 노동절을 즈음해 네팔 정당인에게 보내는 탄원 캠페인에는 국내 거주 네팔 이주노동자를 포함 1,217명이 탄원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네팔 공동체 19개 단체 대표서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7개 대표서한, 민주노총 위원장 서한을 네팔 정당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노동절 당일에는 〈네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맛있는' 인권〉을 열어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이주 과정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네팔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2012년 역시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긴박한 인권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부의 진압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 연일 인권침해 보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한국지부는 매달 온라인 탄원과 긴급행동을 통해 긴급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12월에는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을 통해 2만 통 이상의 탄원편지를 발송하여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 압력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ERNEST
편지쓰기마라톤 레터나잇에서 공연중인 집시의 테이블

©Amnesty International
개편된 UA 홈페이지

©Amnesty International

©ERNEST
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한 회원들

2012년 한 해 동안 자의적 구금, 폭행, 불공정한 재판 등 인권을 침해 받은 개인을 위해 총 671건의 긴급행동 사례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들 사례에 대해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폭탄테러혐의를 받고 사형집행위기에 처해있던 미얀마의 사형수가 풀려났고, 수단과 카자흐스탄의 양심수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지부 역시 긴급행동 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매달 2회 긴급행동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례지를 우편을 발송하고,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탄원편지쓰기에 동참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20건의 사례지를 발송하고 1,354통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편지쓰기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인권이 달린다– 편지 한 통의 기적〉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편지쓰기마라톤은 한 해 동안 앰네스티가 활동해온 수많은 탄원활동 중에서도 특히 국제적인 압력이 시급한 12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탄원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지부 역시 12개의 사례 모두에 동참했고 12월 한 달 동안 회원 및 지지자의 꾸준한 참여로 20,491통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7개국의 약 5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참여하여 약 190만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같은 압력에 과테말라 부통령은 10년 전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었던 15세 소녀 마리아 이사벨 프랑코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대만의 최장기 사형수인 치우호슌은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되어있던 중국의 인권변호사 가오즈셩은 탄원이 이어진 뒤 면회가 허락되면서, 감옥에서나마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부는 올해 역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원이 모여 이루는 커다란 힘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더 많은 회원과 지지자가 세계 곳곳에서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작지만 강력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나는 존엄하다)))

"집도 인권입니다"
집은 단순히 네 개의 벽과 하나의 지붕만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한국지부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주거권을 위협하는 강제퇴거를 중단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를 집중 캠페인 국가로 선정하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국내의 주거권 활동과도 연대하여 집이 재산이 아닌 인권의 문제임을 알렸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두개의 문 시사회에 참석한 회원들

©LICADHO Canada
캄보디아에 전달된 한국시민들의 강제퇴거 중단 탄원

한국지부는 2012년 '아시아에서 강제퇴거 중단'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폭력적인 강제퇴거로 고통받고 있는 두 나라,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를 위한 집중캠페인을 기획하고 활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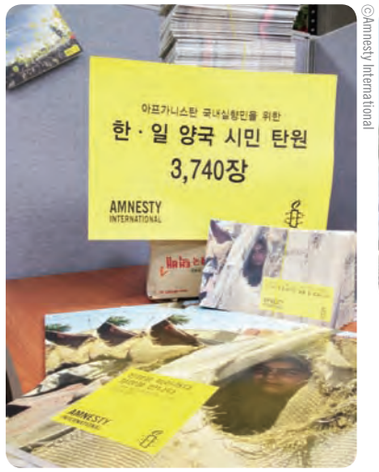
2012년 2월에 발간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전쟁을 피하려다 절망을 만나다: 곤경에 처한 아프간 국내실향민들」를 번역하여 국내에 배포하고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아프가니스탄 실향민들이 피난지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7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공여국 회의에 국내실향민 Internal Displaced Person의 인권상황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로비활동을 조직하였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거리캠페인을 통해 탄원을 모으고, 일본지부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여 5천장 이상의 탄원을 한국과 일본 외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공여국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아프간 민간인 보호, 아프간 여성 인권 보호, 아프간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지속 가능한 귀환과 재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역시 높아지는 국제적 압력에 반응하여 국내실향민의 주거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반을 만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입안을 약속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캄보디아의 강제퇴거문제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 「캄보디아의 퇴거와 저항: 다섯 여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전역에서 강제퇴거에 맞서 저항했던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내에 전달하고 그동안 여행지나 투자처로만 익숙했던 캄보디아의 또 다른 인권현실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거리 캠페인과 소규모 강연, 학교 방문교육 등을 통해 대중에게 강제퇴거 문제를 알렸고, 회원들이 직접 거리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11,327장의 탄원과 연대메시지를 캄보디아에 발송했습니다. 이는 한국지부를 포함한 세계 지부에서 4만 통 이상의 탄원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국제앰네스티가 보낸 탄원은 캄보디아 국회 앞에 전시되었고, 이후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캄보디아 주거권 단체 및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에서 보낸 연대 메시지를 머리에 쓰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집은 인권"이라는 메시지로 개사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보낸 강제퇴거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전달받는 캄보디아 국회의장은 강제퇴거 문제에 대해 세계가 보낸 우려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은 캄보디아 강제퇴거 지역 주민들과 주거권 운동 단체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거권을 더 힘차게 옹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보낸 강제퇴거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전달받는 캄보디아 국회의장은 강제퇴거 문제에 대해 세계가 보낸 우려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나 안전조치 없이 사람을 살던 곳에서 내모는 강제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한해 동안 아시아에서 강제퇴거 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사회 구조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는 강제퇴거를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쉽게 사라지거나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지부는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서 강제퇴거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퇴거가 중단되는 그날을 앞당기는 데 회원과 지지자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LICADHO

좌 한 · 일 양국 외교부에 전달된 아프가니스탄 캠페인 탄원엽서
우 한국시민들의 연대 메시지를 머리에 쓰고 캄보디아 의회 앞에서 강남스타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캄보디아 주민들

국내인권상황

한국지부는 한국에서 양심과 사상 · 표현의 자유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보안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새로운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를 발굴해 국제앰네스티 국제운동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재임 관련 논란 및 제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세계연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소녀상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캠페인

2012년 한 해에만 6명의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는 2013년 5월 현재 59명이다.

한국지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을 올해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완전한 사과와 전적인 배상,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 성노예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린 세계연대집회에도 참석해 소셜미디어 등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세계연대집회이후 약 15일간 온라인 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에게 사죄하라〉 탄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큰 호응을 받아 총 3,500명이 탄원에 참여하였고, 이를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매년 약 80여명이 평화적 신념으로 총 잡는 것을 거부하고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젊은이는 현재 약 750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한국지부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은 3월 21일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복무 관련 연대단체들과 함께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병역거부권 실현을 촉구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는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지부는 국제사무국과 함께 병역거부자 사례 조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기존 사례자인 문명진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평화단체 전쟁없는세상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례를 찾았습니다. 선정된 사례자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인 유윤종(활동명 공현)씨로 4월말에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시작했고

©프레시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윤종(공현)

한국지부는 여주교도소를 방문하며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유윤종씨 사례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IAR 사례에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유윤종씨는 한국지부 회원에게 옥중서신을 보내며 수감생활 및 다른 국가로부터 연대편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에 기재된 유윤종씨 옥중서신에서 '매일 애국가 제창을 시키는 것'을 지적했는데,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2년 112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건수는 32건에서 89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2012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입건 및 기소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네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자의적으로 기소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기록했습니다.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문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5월 31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본격'異的'라디오, 리트윗쇼〉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불복종행동*과 공동기획했으며,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소개, 피해자 인터뷰, 음악 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29일에는 보고서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참석해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사용자 개인까지도,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보기 어려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도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은 12월 14일 법무부 인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국가보안법에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는 제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질의한 한국주재 대사관 52곳에 배포되었습니다.

※ 2012년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심의에서 한국은 67개 심의 참가국으로부터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 부재 등과 관련해 우려 및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기타 인권상황

국제앰네스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7월 15일 「국가인권위 위원장 연임과정 불투명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인권위원 임명과정에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0월 유엔 제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영국, 미국, 독일, 필리핀, 멕시코,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국제앰네스티 NGO 의견서를 방문전달 혹은 송부했습니다. 의견서 전달을 통해 국가보안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사형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 국내 인권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ducation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미션입니다.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존중의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려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에서는 이러한 인권의식 증진활동의 일환으로 온 · 오프라인 교육, 대중강연, 학교 및 기관 방문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시도하고, 앰네스티 인권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한여름 밤의 인권영화

한여름 밤의 인권영화

영화를 통해 앰네스티 캠페인을 보다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여름 밤의 인권영화〉가 6월 15일, 22일 양일간 조계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제 첫날에는 '무기거래조약 국제행동주간'을 맞아 영화 〈로드 오브 워〉를 상영했습니다. 앤드류 니콜 감독의 〈로드 오브 워〉는 규제 없이 이루어지는 국제무기거래에 의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화 상영에 앞서 세계 무기거래 실태와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내용을 듣고 유엔에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칸다하르〉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피해 캐나다로 망명한 주인공이 동생을 만나기 위해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아프간행을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칸다하르〉를 통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아프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 피난생활에 겪는 빈곤과 비참한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에 한 · 일 공동으로 6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캠페인 활동을 보고하고, 활동에 동참한 '최강 캠페이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인권입문과정

2012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2012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가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렸습니다. 인권입문과정은 인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연구자가 국내외 쟁점이 되는 인권이슈와 인권침해의 심각하고 절박한 현실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인권입문과정은 사형제도, 표현의 자유, 빈곤, 양심과 사상의 자유, 무기, 차별 등 한국지부가 집중하고 있는 캠페인 이슈를 비롯해 현재 국내외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된 인권입문과정은 92명이 참가해 총 50명이 6강 이상 출석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았습니다. 2013년 6회를 맞는 인권입문과정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인권이슈과정

©Amnesty International
대선대담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가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여의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이슈과정은 특정 인권이슈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과 문제점, 원인 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심화된 인권학습과정입니다. 2012년 인권이슈과정은 08년 촛불집회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영역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으며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공동주최했습니다.

2012 인권이슈과정은 선거시기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업무방해죄 등 포괄적인 생활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권이슈과정은 38명의 참가자들과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와 교수,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실천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인권이슈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블로그(blog.amnes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 가이드라인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인권대통령!〉

18대 대선 가이드라인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인권대통령!〉이 12월 17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부는 지난 5년 동안 후퇴한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하고자 대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및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한 이날 대담에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급증하는 자살률 추이, 기형적인 주택보급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위기를 분석하는 한편, 18대 대선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2012 온라인인권대학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amnesty.or.kr/edu-online

2012 온라인인권대학의 주제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최근 국가보안법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알리고자 온라인인권대학의 주제를 국가보안법으로 정했습니다. 2012 온라인인권대학은 1강 '트위터리안 박정근이 말하는 국가보안법'과 2강 '안보가 인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총 2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강에서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하고, 이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강에서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서울지역 중심의 인권의식증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온라인인권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이주노동자, 빈곤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웹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 Work

미디어 활동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힘없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텔레프린터와 팩스에서부터 인터넷과 이메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인권을 위한 싸움을 지원해왔습니다.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은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인권정보와 앰네스티 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웹 & 소셜미디어

2012년 7월 한국지부 웹사이트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지부 설립 40주년을 맞아 회원과 지지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개편했습니다. 개편된 웹사이트와 블로그, 소셜미디어, 뉴스레터가 각 특성에 맞게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 앰네스티의 활동과 이슈를 알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무엇보다 인권을 위한 액션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온라인액션, 모바일액션, 긴급행동 등 앰네스티가 집중하는 모든 캠페인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액션내역은 액션스트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참여한 모든 액션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사례를 알릴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등으로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레이아웃와 직관적인 구조로 사이트 내 이동이 쉬워졌고, 세분화된 카테고리와 연관자료 링크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C가 아닌 모바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웹을 구축했고,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접근성 향상도 이루어 언제 어떤 기기로든 접속이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의 환골탈태로 방문자 수, 페이지뷰 등 모든 지표에서 2011년에 비해 약 5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앰네스티 웹사이트는 앞으로도 국제인권상황에 대해 가장 빠르면서도 참여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온라인을 통한 인권상황 개선의 최첨단에 서 있을 것입니다.

웹사이트 개편과 함께 새로워진 블로그는 2012년 총 90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2011년 138건의 2/3에 불과한 수치지만 오히려 총방문자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인기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페이지뷰는 6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개편으로 사용자환경이 개선되어 이용이 훨씬 간편해진 점과 인권교육과정, 캄보디아 캠페인, 언론상 리뷰 등의 기획된 콘텐츠가 많은 눈길을 끌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통해 국제인권뉴스, 문의, 온라인 탄원, 행사소식, 인권 관련 이슈 등 앰네스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앰네스티 공식계정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웹사이트amnesty.or.kr 유입이었습니다. 2012년 한 해동안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웹사이트 유입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20,99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171% 상승한 수치입니다. 페이스북 또한 300%에 가까운 '좋아요'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내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이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양적인 성장보다는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에 앰네스티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2 연례보고서 기자회견

2012 연례보고서 기자회견 amnesty.or.kr/연례보고서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5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유엔과 유럽의회, 미주인권위원회의 자문기구 지위를 유지하는 등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내놓는 연례보고서 또한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의 서문 「거리로 나선 시민들, 실패한 리더십에 맞서다」로 시작하는 2012 연례보고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일어난 155개국의 인권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기조영상을 통해 "시위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시위대는 각국 정부가 정의와 평등, 존엄을 위해 일어서 줄 것을 요구하며 맞섰고, 시위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시작이 좋지 못했던 만큼 2012년은 행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부는 5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를 포함한 세계 인권현황을 국내 언론에 알렸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곳은 국제앰네스티가 유일하기 때문에 많은 내외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정필 한국지부 캠페인 팀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논의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를 밀접하게 감시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RNEST

제15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자와 심사위원단

©ERNEST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제15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or.kr/제15회-국제앰네스티-언론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해마다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언론인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되어 제15회를 맞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총 45편이 응모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김주원 KBS이사)은 이 중 3편의 본상과 특별상 2편을 선정했습니다.

김주원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문제, 용역폭력, 민간인 불법사찰, 다문화가정 등 2012년에는 유난히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며 그 중에서도 다른 매체에서 주목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시사다큐팀의 〈그것이 알고 싶다〉『유골은 무엇을 말하는가-장준하, 그 죽음의 미스터리』는 독보적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유신독재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재조명하여 그의 죽음을 둘러싼 37년간의 전말을 취재하고, 공개된 유골의 상흔을 법의학적 기법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방송 이후 2013년 3월,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정밀감식을 통해 "장준하 선생이 머리 가격을 당해 숨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시사제작국 〈추적 60분〉 팀은 검찰수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나는 억울하다' 검찰수사 피해자들의 절규』를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찾아내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끈질긴 취재를 통해 발굴해낸 기자정신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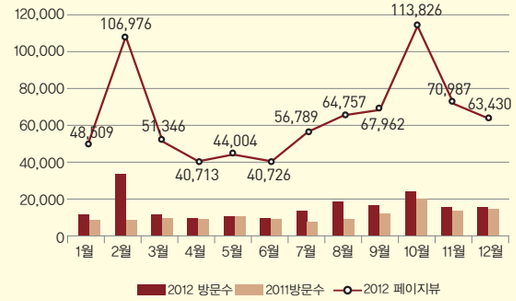
한겨레신문 24시팀의 『무죄의 재구성-노숙소녀 살인사건』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에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과 청소년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법 체계의 허점을 파헤친 보도입니다. 5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최초 범인으로 기소됐던 30대 노숙인이 대법원에서 재심결정을 받기까지, 그리고 범행을 자백한 가출 청소년 5명과 2명의 노숙인의 수사과정과 사실관계를 다시 취재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국가에 의해 삶이 망가져 가는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 물증 없이 강압수사를 해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고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별상으로는 EBS의 『배움너머』와 다큐영화 『두 개의 문』이 선정 되었습니다. 『배움너머』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종교분쟁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 청소년의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영화 『두 개의 문』은 객관적 시각에서 3년 전 일어났던 용산참사를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6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용산참사를 '망각의 문'에서 '진실의 문'으로 걸어 나오게 했다"라는 호평을 받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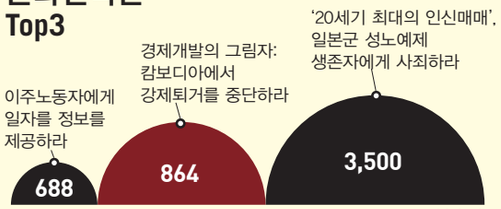
2012년 가장 많이 본
국제인권뉴스 Top3

-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개국에서 최소 676 명이 처형돼
- **가족계획의 핵심**은 피임이 아니라 **'인권'**이다
- 한국-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

2012년 웹사이트 방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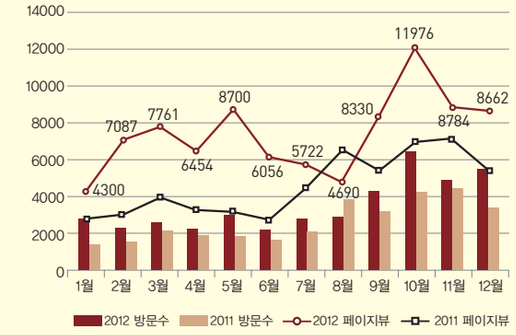


2012년 가장 많이 참여한
온라인액션 To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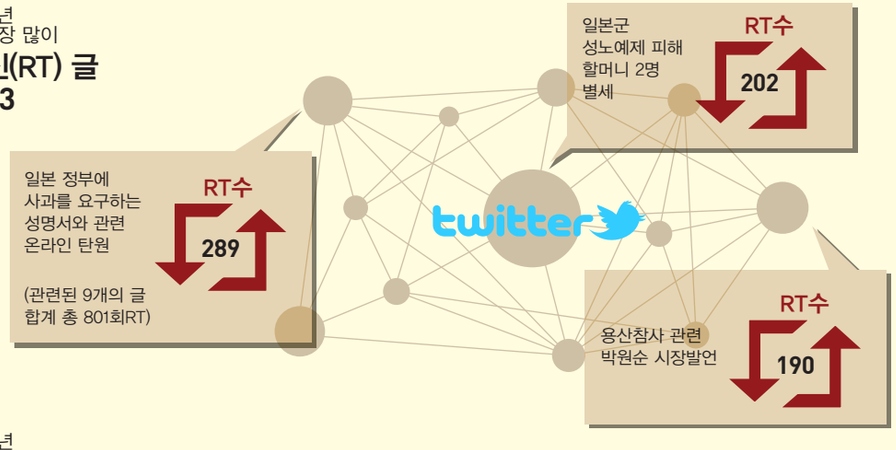


(단위: 명)

2012년 블로그 방문현황



2012년 가장 많이
퍼진(RT) 글 Top3



2012년 가장
'좋아한' 글 Top3

facebook

Group & Network

회원활동

그룹 및 모임활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활동조직으로 그룹, 비공식 모임이 있으며, 2012년에도 한국지부 활동조직 회원들의 눈에 띄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에 새로 구성된 55그룹과 예비(청소년)그룹은 정기적인 인권이슈 학습과 대외 활동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운영을 안정화하였습니다. 촛불모임이 공식적인 그룹 신청을 통해 예비그룹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숙명여대 대학원생들의 모임인 반디그룹이 56번째 그룹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48그룹, 대전모임, 온라인모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성소수자 차별문제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인권활동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2012년 활동조직은 캠페인 효과성과 영향력을 높이기 활동조직간의 교류와 공동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예비(촛불)그룹은 3회째로 맞는 〈작은인권영화제 '꽃'〉을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55그룹, 예비(청소년)그룹 등과 함께 공동주최해 영화제의 내용과 규모를 확대했고, 온라인모임과 55그룹은 부천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알리는 퍼포먼스 및 탄원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국지부 활동조직은 2012년 정기총회 분임토의를 계기로 활동조직 대표자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자모임은 한국지부의 회원활동을 활성화하고 활동조직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2012년 총 3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2013년 이사회, 사무국, 회원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트위터
@amnestyact
페이스북
facebook.com/amnestyact
까페
cafe.naver.com/amnestyact
메일
aikoreastudent@gmail.com

새내기회원모임

새내기회원모임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앰네스티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2월을 제외한 짝수 달 마지막 주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4번, 광주에서 1번의 새내기회원모임을 열어 총 75명의 회원이 함께했습니다. 새내기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도 자리해 회원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새내기회원모임에서는 앰네스티의 비전과 활동원칙을 소개하고, 캠페인과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앰네스티의 캠페인 방법인 탄원편지를 직접 써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대학생네트워크 강제퇴거중단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대학생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Amnesty International

인터뷰보고서 – 우리도 사람이다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

대학생네트워크

대학생네트워크는 2012년 내적 · 외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주노동자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학생네트워크 자체 인터뷰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성애 중심적 표준어 정의 개정 캠페인을 통해 국립국어원이 '애인, 연인, 연애'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학습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인권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네트워크는 20대 또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2012년 대학생네트워크 캠페인 활동보고

- **네팔 이주노동자 프로젝트(2월~10월)**
  - 네팔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인터뷰 진행(2월~4월)
  - 인터뷰 보고서 중간발표 네팔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맛있는 인권' (5월 1일)
  - 인터뷰 보고서 「우리도 사람이다: 2012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발간 및 좌담회(10월)
- **이성애 중심적인 표준어 정의 개정을 위한 캠페인(6월~11월)**
  - '애인, 결혼, 가족' 등에 대한 이성애 중심적인 표준어 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 시작(6월)
  - 퀴어문화축제, 지보이스 행사 등에 참여해 개인과 단체를 통해 1천여 명의 서명 취합(6월~9월)
  - 트위터 이용자들과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에 온라인 청원 진행(10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세 가지 단어 '애인, 연인, 연애'의 정의 개정(11월 20일)
  - ① 애인(愛人):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에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개정
  - ② 연인(戀人):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남녀, 또는 이성으로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에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개정
  - ③ 연애(戀愛):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함'에서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으로 개정
-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인권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결과를 알리는 '인권 매니페스토' 캠페인(3~4월)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연대 활동(4월)
- 작은인권영화제 활동조직 공동 개최(5월 19일)
- '비정상가족' 캠페인(5월 28일)
- 퀴어문화축제 참가(6월 2일)
- 매화복지관 청소년 인권교육(7월)
- 캄보디아 강제퇴거 중단 캠페인(11월)

Activism

참여활동

2012년은 액티비즘 전략 시범사업인 모바일액션과 액션패키지를 통해 참여, 지지자, 영향력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한 액션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지역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트렌트를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네트워크와 그룹, 모임 등 회원 활동조직도 활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궁금한 앰네스티 액티비즘(참여활동), 2012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만나보세요.

©Amnesty International
모바일액션 리플렛

모바일액션

2011년 액티비즘 전략을 기반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모바일액션'의 신청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모바일액션은 문자를 통한 쉽고 신속한 방법으로, 회원과 지지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이 휴대폰 문자로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바일액션에 꾸준히 참여하는 열성회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이집트 여성의 참정권, 무기거래조약, 이주노동자, 캄보디아 강제퇴거 등 21개 사례에 대해 모바일액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8,811건의 문자서명이 모여 인권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고,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바일액션은 계속됩니다. #1961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세요.

©Amnesty International
집, 인권을 만나다 – 액션패키지

©Amnesty International
집, 인권을 만나다 – 액션패키지에 참여한 사람들

액션패키지

액션패키지는 더욱 많은 사람이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 이슈에 대한 소개자료와 참여 방법을 담은 액션자료입니다. 2012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캄보디아 강제퇴거 중단 캠페인,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과 통합하여 두 차례의 액션패키지를 진행했습니다. 〈집, 인권을 만나다〉 액션패키지는 캄보디아 경제개발의 그림자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다섯 명의 여성들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선생님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캄보디아 정부에 강제퇴거 중단을 촉구하고, 캄보디아 주민에게는 연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즈음해 인권침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 〈편지쓰기마라톤〉 패키지에 올해도 많은 분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지부에서는 21,846통의 편지를, 전 세계적으로는 140만 통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액션패키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대중에게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전파할 수 있었던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2013년에도 액션하라! 액션패키지는 계속됩니다. 더욱 다양한 이슈,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활동, 더욱 많은 사람을 아우르는 액션패키지를 기대해주세요.

Governance

거버넌스

©Amnesty International
한승헌 변호사

©Amnesty International
2012 정기총회

2012 정기총회

2012 정기총회는 3월 10–11일 양일 간 영등포에 위치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2011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젠더와 다양성, 거버넌스 역량 강화, 회원모임 활성화 등의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지부의 초대 이사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튿날은 회원들에게 2011년 국제대의원총회ICM 결과보고 및 국제운동의 최근 흐름을 전달하는 것으로 총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날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간 한국지부를 이끌어줄 새로운 임원을 뽑는 선거도 진행되었습니다. 전경옥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총 12명의 21기 임원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사회

21기 이사회는 임기 2년 중 첫 해인 2012년에 두 가지 큰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년간 매년 총회에서 논의되었지만 깔끔히 정리되지 못했던 한국지부의 정관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회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거버넌스의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관을 지난 총회에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승인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이사회는 사무국의 안정과 강화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제정책포럼

국제정책포럼은 2011년 11월부터 국제운동의 흐름과 정책들을 이해하여 2년마다 열리는 국제대의원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여 동안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제대의원총회 결정문Resolution과 앰네스티 주요 결정문, 그리고 한국의 인권이슈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포럼에서는 2013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대의원총회를 위한 준비에 집중해왔습니다. 국제집행위원회IEC의 추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타 지부들의 논의 요청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의 첫 회람문서Circular도 검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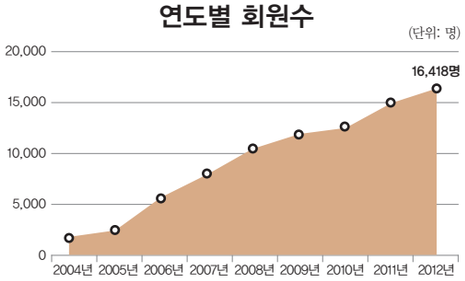
현재 국제정책포럼에서는 인권 · 거버넌스 · 조직 · 재정으로 이루어진 ICM 주 논의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의견과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지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정책을 결정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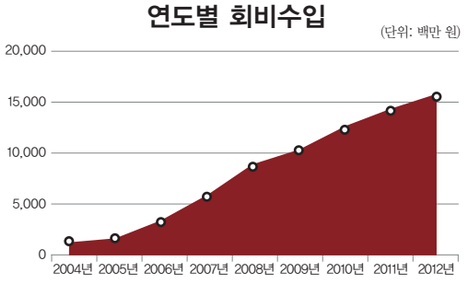
회원성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6년 간의 장기계획인 통합전략계획ISP(2010–2015)에서 지금까지 이룬 성장을 내실화 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제 2의 성장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한국지부는 인하우스(in-house)로 전환된 주요모금사업을 안정화하고 확장하여 내부역량강화를 모색했습니다. 2013년은 앰네스티의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한 통합사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고 인권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연도별 회원수



연도별 회비수입



회원수와 재정의 성장

2012년 12월 기준 회원 수는 1만 6,418명으로 2011년과 비교하여 1년간 약 1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회원의 정기후원금(회비수입)은 약 15억 6천만원으로 한국지부 전체 수입의 92%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9%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지키는 엄격한 내부지침에 따라 일시후원은 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라인모금, 해피빈 등 다양한 모금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전년대비 5%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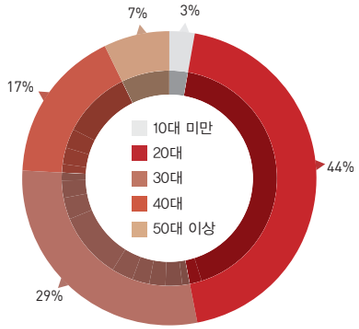
회원의 연령, 성별 분포

(단위: 명)

성별	연령대					계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162	2,708	2,116	1,334	702	7,022
여	344	4,372	2,634	1,349	459	9,158
	506	7,080	4,750	2,683	1,161	16,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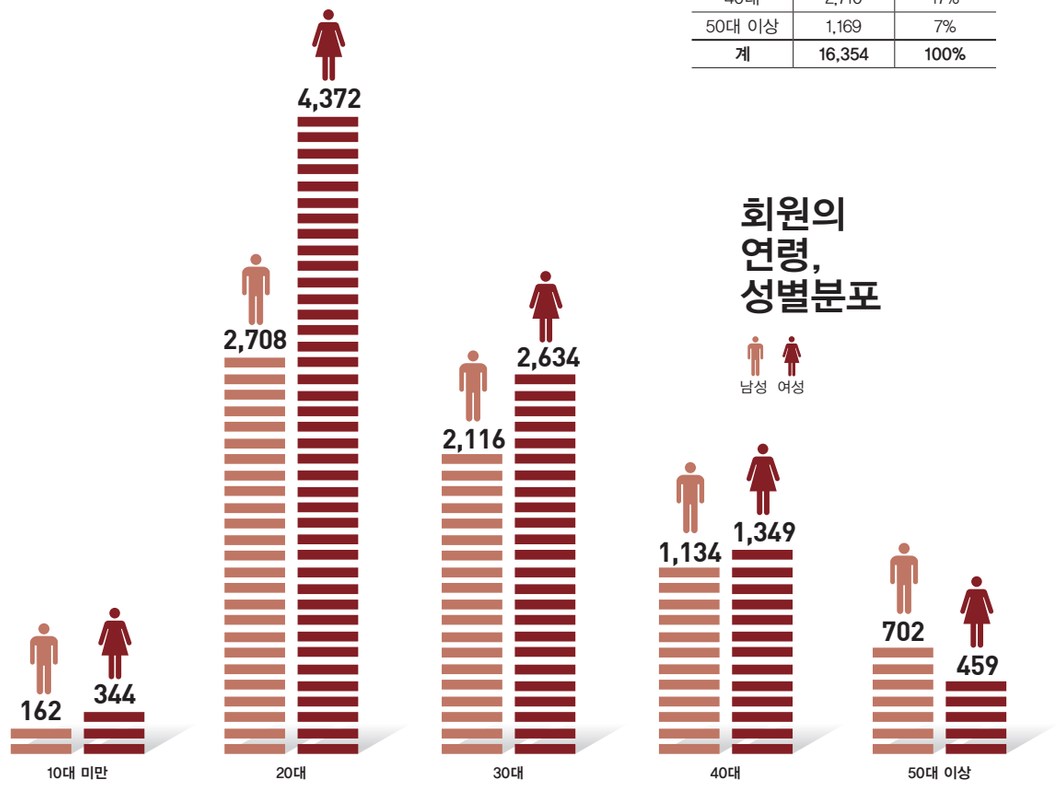
회원의 연령과 성별 비율

연령과 성별 확인이 가능한 회원 총 16,180명 중 20대가 7,135명(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 4,791명(29%), 40대 2,710명(17%), 50대 이상 1,169명(7%), 10대 미만 549명(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회원이 총 회원의 73%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젊은 회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비율을 보면 여성회원이 57%, 남성회원 43%로 여성 회원의 비중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회원은 총 회원수의 27%로 다른 연령대나 성별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의 연령분포

	연령	비율
10대 미만	549	3%
20대	7,135	44%
30대	4,791	29%
40대	2,710	17%
50대 이상	1,169	7%
계	**16,354**	**100%**



연도별 회원수와 회비수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회원수(명)	1,670	2,235	5,517	7,863	10,325	11,778	12,515	14,946	16,418
회비수입(원)	69,182,000	105,431,000	282,501,000	548,101,000	843,741,000	1,025,879,000	1,240,073,524	1,435,964,294	1,561,502,031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수 입
2012.01 ~ 2012.12

(단위 : 원)

관	항	2012년			예실대비(%)
		예산	수지결산	(%)	
사 업 수 입	회비수입	1,711,000,000	1,561,502,031	92%	91%
	후원금수입	40,000,000	40,872,035	2%	102%
	행사수입	6,000,000	9,998,000	1%	167%
	국제기금	80,000,000	57,300,000	3%	72%
	사업수익 소계	1,837,000,000	1,669,672,066	99%	91%
사업외 수 입	이자수익	4,000,000	22,043,150	1%	551%
	기타수입	-	2,054,332	0%	314056%
	사업외수익 소계	4,000,000	24,097,482	1%	602%
계		1,841,000,000	1,693,769,548	100%	92%

목적별 사업비 지출
2012.01 ~ 2012.12

(단위 : 원)

구분	전략적캠페인	액티비즘	회원모집캠페인	모금
금액	231,781,265	24,986,397	38,633,978	357,272,727
구성비	22%	2%	4%	34%
커뮤니케이션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분담금	계
145,030,815	96,928,445	36,639,655	111,208,240	1,042,481,522
14%	9%	4%	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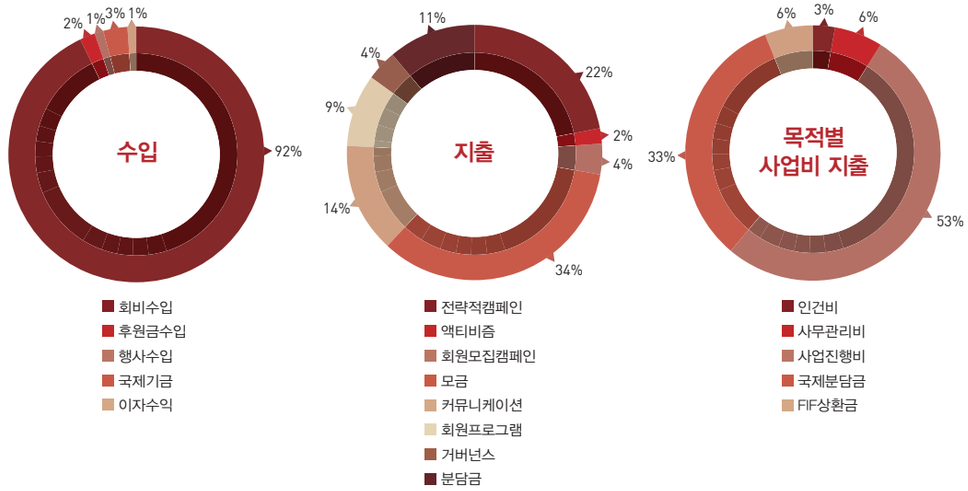
*목적별 사업비는 예실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에 의해 작성 된 것 입니다.
(단, 2012년 실 사용한금액으로 지출부분의 목적사업비와 금액 (2013,2014년 국제분담금충당부채 및 미지급금_ 470,454,793)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
2012.01 ~ 2012.12

(단위 : 원)

관	항	2012년			예실대비(%)
		예산	수지결산	(%)	
일 반 관리비	인건비	49,720,000	48,496,991	3%	98%
	사무관리비	137,019,483	108,383,202	6%	79%
	일반관리비 소계	186,739,483	156,880,193	9%	84%
목 적 사업비	사업진행비	1,142,035,487	931,273,282	53%	82%
	국제분담금	111,208,240	581,663,033	33%	523%
	목적사업비 소계	1,253,243,727	1,512,936,315	85%	121%
사업외비용	FIF상환금	110,200,000	99,903,890	6%	91%
	지급이자	2,000,000	-	0%	0%
	기타비용	1,000,000	643,509	0%	64%
	예비비	65,000,000	2,000,000	0%	3%
	사업외비용 소계	178,200,000	102,547,399	6%	58%
계		1,618,183,210	1,772,363,907	100%	110%

*수입과 지출은 예실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에 의해 작성 된 것 입니다.
*예실대비 수입지출 현황은 총회를 통해 승인, 보고 되었습니다.



국 제 앰 네 스 티

1977년 노벨 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국제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2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분노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에 의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만 회원 및 지지자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실태 조사와 캠페인을 수행하는 세계최대인권 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창립된 이후 현재 1만 6,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폐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무기거래통제 그리고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발행일 2013년 5월 16일 · **발행인** 전경옥 · **발행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홈페이지** amnesty.or.kr
주소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 **전화** 02. 730. 4755/6 · **편집** 사무국 · **디자인** the DNC